

“언론계 숙원” vs “악법중 악법”...방송법 개정안 충돌

민주 “공영방송 독립·중립성 보장” 국힘 “언론노조 영구장악 법안”

국회 과방위 논의 결론 못내고 공방

여야는 24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고, 여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맞섰다.

반면,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원이 5만을 돌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다”며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은 올해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 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몰아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 더욱 언론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또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

적 소명이 되었다”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국면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악법 중 악법이다”라며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면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 친(親) 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방

송 악법’을 원점부터 논의하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을 국민의 힘으로 폐기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립대 내년 운영비 전남도의회 15억원 삭감

전남도의회가 부실한 운영과 직원들의 기강 해이 등으로 지적을 받았던 전남도립대의 내년도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또 설치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높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전남도청사 호수주차장 태양광 교체공사’ 사업비도 깎았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 자치행정국이 편성한 2023년 전남도립대 운영비 44억6300만원 중 15억원을 삭감, 예결위원회로 넘겼다. 도립대가 마련한 혁신안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의 부실·방만 운영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도의회 판단이다.

도의회는 그러나 대학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집행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학생들의 장학금(7억7300만원), 외래교원 인건비 등(8억8100만원)을 제외한 용역비·시설 보수공사비 등 15억원을 삭감했다.

앞서, 도립대는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평가에서 전국 7개 도립대 중 유일하게 탈락하는가 하면, 임의적으로 구조조정 대상학과를 누락하거나 제외하는 등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학과 구조조정·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전남도도 전남도립대에 대한 최근 정기종합감사와 추가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5건을 적발해 13건(6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32건에 대해서는 주의·개선·기각경고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었다.

/김지승 기자 dok2000@kwangju.co.kr

스토킹 방지·피해자 지원법

국회 여성가족위 통과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

대장동 일당 연루 단서 찾기

김혜경 법인카드 제보자도 조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수년 치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서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거래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정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이 돈 종이 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 중이다.

이 대표 측은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검찰이 악의적 추적을 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7000여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이라면서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5000만원, 같은 해 10월 25일 5000만원을 각각 인출했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2020~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野 인사 줄수사 맹비난

노영민·오영훈 도 수사선상에

지도부 “대응수위 끌어 올려야”

야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고 노용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개입 의혹 수사에 이어 23일에는 오영훈 제주지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24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성토와 함께 뒤숭숭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야권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나올 정지권 마당밭이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 강도나 속도,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탄압의 명분으로 장외집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 검찰 수사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당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검찰 수사가 너무 막 나가고 있어 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친명(친 이재명) 지도부가 이 대표 감싸기에만 나서면서 사정 정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 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 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금매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